STRATEGY 21
통권33호 Vol.17 No.1, 2014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동아시아 안보

한 석 희*

Ⅰ. 서 론

Ⅱ.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의 원인

Ⅲ.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의 사례
1. 천안함 사건
2. 이어도 문제
3.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Ⅵ. 향후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에 대한 평가: 변수와 전망

Ⅴ. 결론: 동아시아/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

Ⅰ. 서 론

중국의 부상은 더 이상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1978년 시작된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경제·외교적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해왔으며, 그 바탕 위에서 이제는 군사·문화적 강대국으로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부상하는 중국을 보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앞으로 중국이 지속적으로 부상할 것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이라는 전제 하에 중국의 부상이 국제사회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물론 강대국을 향한 중국의 부상이 국제사회의 이익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은 자국의 부상이 결국 국제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것이며 보다 많은 가치를 공유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 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1]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 특히 중국의 주변국들은 중국의 부상이 결국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위협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으며, 그 우려의 중심에는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가 자리잡고 있다.[2]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가 문제시된 것은 2010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에서 기인한다. 물론 2009년에 있었던 코펜하겐 기후변화 협약에서 중국이 보여주었던 비협조적인 태도도 공세적 행태에 포함되지만 중국이 행했던 대부분의 공세적 대외행태는 2010년에 집중되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3] 예를 들어 미국의 對대만 무기판매에 대한 중국의 강경대응이라든지 달라이 라마의 미국방문에 대한 중국의 항의, 남중국해에 대한 "핵심이익" 지정,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대응 및 센카쿠/댜오위다오를 둘러싼 갈등은 모두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1)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을 참조. Wang Jisi, "China's Search for a Grand Strategy: A Rising Great Power Finds Its Way," *Foreign Affairs,* Vol. 90, No. 2 (March/April, 2011), pp. 68-79.

2)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Michael D. Swaine, "China's Assertive Behavior-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4 (Winter 2011). http://media.hoove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CLM34MS.pdf; Michael D. Swaine, "China's Assertive Behavior-Part Two: The Maritime Periphery,"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5 (Summer 2011). http://media.hoove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CLM35MS.pdf; Michael D. Swaine, "China's Assertive Behavior-Part Three: The Role of the Military in Foreign Policy,"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6 (Winter 2012). http://media.hoover.org/sites/default/files/ documents/CLM36MS.pdf; Michael D. Swaine, "China's Assertive Behavior-Part Four: The Role of Military in Foreign Crise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7 (Spring 2012). http://media. hoove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CLM37MS.pdf; Alastair Iain Johnston,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7, No. 4 (Spring 2013), pp. 7-48; Thomas F. Christensen, "The Adavantage of an Asserive China: Responding to Beijing's Abrasive Diplomacy," Foreign Affairs, No. 90, No. 2 (March/April, 2011), pp. 54-67; Daniel Blumenthal, "What Happened to China's Peaceful Rise?" Foreign Policy (October 21, 2010). http:// shadow.foreignpolicy.com/posts/2010/10/21/what_happened_to_chinas_peaceful_rise.

3) 기후변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다음을 참조. Gloria Jean Gong, "What China Wants: China's Climate Change Priorities in a Post-Copenhagen World," *Global Change, Peace & Security,* Vol. 23, No. 2 (June 2011), pp. 159-75.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로 중국의 부상 및 미국의 침체가 확인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결국 지난 30년 동안 유지해왔던 중국의 현상유지 정책(status quo)이 변화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4)]

일반적으로 국제정치에서 공세적 대외행태란 "자신감있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한 국가의 권리와 주장을 지켜나가는 것([A]ssertiveness in international relations means a confident and direct way to defend one country's rights or claims.)"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3가지로 분리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유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첫째, "공격적 공세"(offensive assertiveness)이다. 이는 강대국이 강압적 행위를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이나 영향력을 확장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다른 나라로부터의 저항없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방어적 공세"(defensive assertiveness)이다. 방어적 공세는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강대국의 능력과 의지가 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강대국들이 이것을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 쓰기보다는 이익을 지키는 데에만 쓰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는 "구성주의적 공세"(constructive assertiveness)로서 강대국이 자국의 리더쉽을 이용하여 지역 또는 범세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경우를 지칭한다.[5)]

특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들의 공세적 대외행태에 대한 일반화된 정의 및 유형을 중국의 상황에 대입하여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를 분석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를 "방어적 공세"라고 규정짓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주요 원인은 이 같은 연구에서 분석의 초점이 결국 2008년 이후 중국의 외교적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였느냐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이들 연구는 중국이 자국의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공세적인 면을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제체제에 대한 중국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강대국들은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를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

4)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의 주요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 연구는 Alastair Iain Johnston,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s New Assertiveness?" pp. 7-48를 참조.

5) Dingding Chen and Xiaoyu Pu, "Correspondence: Debating China's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8, No. 3 (Winter 2013/14), p. 177.

근본적인 위협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에 대하여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6)]

그러나 중국의 주변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를 훨씬 더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강대국 간의 논의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변국들의 입장보다는 강대국들의 글로벌 전략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및 중국과의 상당한 국력격차를 느끼고 있는 주변국들에게 있어서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위협 및 질서안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7)] 특히 대다수의 중국 주변국들은 중국 경제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중국 주변국들은 중국이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적 공세를 강화해 나가는 소위 "중국의 강압적 경제외교(China's coercive economic diplomacy)"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게다가 중국과의 국력격차로 인하여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8)] 따라서 이들 주변국들은 공세적 대외행태를 통한 중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동맹 및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9)]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관련하여 최근에 제기되

---

6) 죤스톤(Johnston)은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를 방어전 공세로 결론짓고 있다. Alastair Iain Johnston,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s New Assertiveness?" pp. 7-48 참조.

7)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Carlyle A. Thayer, "Can ASEAN Respond to the Chinese Challenge?" *YaleGlobal Online,* March 18, 2014. http:// yaleglobal.yale.edu/content/can-asean-respond-chinese-challenge; 문순보, "남중해 영토분쟁: 중국의 지역패권주의와 관련국 대응,"『정세와 정책』, 2011년 7월호. http://www.sejong.org/boad/bd_ news/1/egofiledn.php?conf_seq=2&bd_seq=968&file_seq=1644; 이원형・이선진・신정승・임홍재・양봉렬・이건태・조병제,『중국의 부상과 동남아의 대응』(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11).

8) 중국의 강압적 경제외교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Bonnie S. Glaser, "China's Coercive Economic Diplomacy," *The Diplomat,* July 25, 2012. http://thediplomat.com/2012/07/chinas- coercive-economic-diplomacy/.

9) 결과적으로 중국의 주변국들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국의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미국과는 안보협력, 그리고 중국과는 경제협력을 하는 이중적인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략을 헤징(hedging)전략이라고 지칭한다.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주변국들의 헤징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는 연구는 다음을 참조. Vibhanshu Shekhar, "ASEAN's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 Deploying a Hedging Strategy," *China Report,* No. 48 (August 2012), pp. 253-68; Sukhee Han, "From Engagement to Hedging: South Korea's New China Policy,"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0, No. 4 (December 2008), pp. 335-51.

고 있는 문제는 중국 공세적 대외행태의 원인은 무엇이고, 과연 이러한 공세적 대외행태가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결국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가 주는 동북아시아 안보상의 함의는 무엇인가로 귀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해 본다.

Ⅱ.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의 원인

중국에서 공세적 대외행태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power transition or power shift)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글로벌 리더쉽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세력전이의 가능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해오고 있다.[10] 특히 중국경제가 2010년 일본을 추월하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중국이 이제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인식하면서 경제의 강대화를 바탕으로 미국을 초월한 세계 최강국으로 갈 것이라는 자신감이 확산되었다.[11]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부상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가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회의적인 시각이 다수를 차지한다. 아직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국력격차가 상당히 크며 이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 중론이다.[12]

---

10)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전이를 분석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Jack S. Levy, "Power Transition Theory and the Rise of China," in Zhu Feng and Robert S. Ross, ed., *China's Ascent: Power, Security,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8), pp. 11-33; Willy Lam, "Beijing Seeks Paradigm Shift in Geopolitics," China Brief, Vol. X, Issue 5 (March 5, 2010). http://www.jamestown.org/uploads/media/cb_010_25.pdf.

11) 중국은 2010년 명목상의 GDP에서 일본을 추월하였으며,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에 의하면 2019년에 중국이 미국경제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The Economist,* August 16, 2010. http://www.economist.com/blogs/freeexchange/2010/08/china_0; The Economist, November 20, 2013. http://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3/11/chinese-and-american-gdp-forecasts.

12) "China May not Overtake America This Century after All," The Telegraph, May 8, 2013. http:// www.telegraph.co.uk/finance/comment/10044456/China-may-not-overtake-America-this-century-after-all.html; John Ikenberry, "The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the

물론 중국의 대다수 엘리트들도 당분간 미·중 간의 국력격차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지만,[13] 상당수의 중국인들은 중국이 지난 30여년 동안 보여주었던 미증유의 성공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면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아마도 2030년 정도에는 미국을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중국의 국력신장에 따라 미국과의 국력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대한 우려없이 주변국에 대한 공세적 외교를 자유롭게 전개해야 한다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중국의 외교적 공세에 대하여 중국 국내에서는 중국 정부가 더 공세적으로 대처했었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14]

둘째, 민족주의의 대두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로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자신감이 강화되는 반면, 중국 내부에서는 사회적 불안정이 확산되면서 중국 국내에서는 민족주의가 대두되는 경향을 보이고

West: Can the Liberal System Survive?" *Foreign Affairs,* Vol. 87, No. 1 (January/February 2008), pp. 23-37.

13) 미국을 단시일 내에 따라잡을 수 없다는 중국 엘리트들의 견해는 다음을 참조. 苏剑, "人口问题不解决 中国永远赶不上一美国," 2013年 5月 14日.
http://media.sohu.com/20130614/n378849576. shtml; "再过20年中国还是赶不上美国," 2013年 9月 9日. http://m.guancha.cn/strategy/2013_09_09_ 171060; 何亮亮, "中国 '软实力'为何赶不上美国," 2011年 11月 17日.
http://news.ifeng.com/ world/detail_2011_11/17/10722386_0.shtml?_from_ralated; 中国专家,"中国军事力量100年内都赶不上美国," 2006年 6月 9日.
http://news.163.com/06/0609/09/2J5S29V500011233.html; 赵晓, "别轻看美国, 公平和体制方面中国国100年都赶不上美国," 2010年 2月 12日.
http://finance.ifeng.com/opinion/ fhzl/20100212/1829998.shtml

14) 중국이 2010년에 더욱 공세적인 태도를 취했어야 한다는 견해는 다음을 참조. 王帆, "凌胜利: 中国的外交政策变强硬了吗？如何理解中国新外交,"『当代世界』, 2011年 3期.
http://www.cnki.com. cn/Article/CJFDTOTAL-JSDD201303009.htm; 高祖贵, "坦然应对'中国强硬论'," 『理论导报』, 2011年 01期.
http://www.cnki.com.cn/Article/CJFDTOTAL-LLDB201101019. htm; 韦民, "对中国外交'强硬'的冷思考," 『学习月刊』, 2011年 03期
http://www.cnki.com.cn/Article/CJFDTOTAL- YKXX201103022.htm; 张发岭·李兆谊, "中国强硬回击奥巴马对台新军售," 『思想政治课教学』, 2010年 02期.
http://www.cnki.com.cn/Article/CJFDTOTAL-SXZK201002033.htm; 夏文辉·吴黎明, "中国'傲慢'了吗," 『环球军事』, 2010年 07期.
http://www.cnki.com.cn/Article/CJFDTOTAL-HQJS201 007002.htm.

있다. 중국의 경제적 성공으로 중국사회가 점차 다양화되고 사회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중국내부의 불안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를 완화시키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민족주의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5] 또한 중국의 대외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들이 다양화되면서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군, 대중매체, 에너지 기업, 수출업자, 지방정부 관료 등의 계층들이 대외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사회 내의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민족주의에 자극받아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가 지속·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16]

특히 중국의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해 가야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해외군사활동을 증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또한 부상하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비판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중국의 국가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17] 이와 같은 다양한 주장과 의견들을 바탕으로 중국의 공세적 외교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셋째,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의 조정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은 최근 자국의 부상에 따라서 대외적인 행태를 조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난 30년 간 중국외교의 핵심적 전략으로 작용해온 도광양회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광양회 전략은 중국 대외관계의 핵심적인 지도원칙으로 1990년대 초 덩샤오핑이 제기한 28자 방침에서 비롯된 전략이다. 그 핵심적

---

15) 중국의 민족주의가 중국의 대외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는 다음을 참조. Minxin Pei, "Assertive Pragmatism: China's Economic Rise and Its Impact on Chinese Foreign Policy," *Proliferation Papers* (Fall 2006). http://www.ifri.org/files/Securite_defense/Prolif_Paper_Minxin_Pei. pdf; Suisheng Zhao, "China's New Foreign Policy 'Assertiveness': Motivations and Implication,"ISPI *Analysis*, No. 54 (May 2011). http://www.ispionline.it/it/documents/Analysis_54_ 2011.pdf.

16) Linda Jakobson and Dean Knox, "New Foreign Policy Actors in China," *SIPRI Policy Paper*, 26 (September 2010). http://books.sipri.org/files/PP/SIPRIPP26.pdf; Bates Gill, "From Peaceful Rise to Assertiveness? Explaining Changes in China'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under Hu Jintao," paper presented at the SIPRI conference, "The Hu Jintao Decade in China'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2002-12): Assessments and Implications, Stockholm, April 18-19, 2013. http://books.sipri.org/ files/misc/SIPRI-Hu%20Gill.pdf.

17) 陈先奎, "探索中国特色的海外驻军,"『环球时报』, 2011年 12月 21日. http://m.huanqiu.com/website/23183.html?cid=5; 张殿成, "中国是否应该在海外驻军?"『海外网』, 2013年 3月 29日.http://opinion.haiwainet.cn/n/2013/0329/c2325。74-18379828.html; "中国可用变通方式驻军印度洋,"『中国新闻网』, 2011年 12月 13日. http://edu.163.com/11/1213/14/7L5LSIKU00293L7F.html.

인 내용은 '자신의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뜻으로 덩샤오핑은 이 전략을 향후 적어도 50년간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지도부는 중국의 국력이 신장됨에 따라 그에 걸맞는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외교적 영향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18] 이 과정에서 중국의 지도자들은 과거 도광양회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국가를 지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최근의 변화를 바탕으로 공세적 외교가 비롯되고 있다고 보여진다.[19]

중국의 공세적 외교가 공식적인 중국의 외교정책으로 자리잡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중국의 공세적 외교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향후 중국 대외관계의 한 축으로서 동아시아 안보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온건한 정책으로의 회귀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세적 외교에 대한 지지가 계속되고 또 공세적 행태가 간헐적으로 계속 등장한다는 점은 공세적 외교가 비록 공식적으로는 강조되고 있지 않지만, 중국외교정책에 하나의 경향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의 공세적 외교도 그 중 하나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지속될지 모르는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Ⅲ.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의 사례

2010년 이후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의 사례를 나열해 보면, 미국의 對대만 무기판매에 대한 중국의 강경대응, 달라이 라마의 미국방문에 대한 중국의 항의,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핵심이익" 지정,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중국의 친북한적・반미적 대응, 센카쿠/댜오위다오 이슈에 대한 중

---

18) Dingding Chen and Jianwei Wang, "Lying Low No More? China's New Thinking on the Tao Guang Yang Hui Strategy,"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9, No. 2 (September 2011), pp. 195-216; Hsin Chih Chen, "Soft Way to Consolidate Hard Power: China's New 'Low Profile' Strategy Orientation," *Journal of Defense Studies,* Vol. 5, No. 3 (July 2011), pp. 151-61.

19) "閻學通 : 中國崛起勢不可擋10年後將成超級大國,"『中国经济周刊』, 2013年 11月 13日. http:// www.guancha.cn/politics/2013_11_12_185076.shtml

국의 강경한 대응, 그리고 동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항공식별구역 선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례들은 미국 및 강대국의 입장에서 본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의 유형이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입장에서 공세적 대외행태라고 구분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천안함 사건

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 소속 천안함(PCC-772)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어뢰공격으로 침몰하여,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된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건이었다.[20] 한국 정부는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민간・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 전문가 24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공식발표하였다.[21]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미국 및 유럽 연합, 일본, 그리고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천안함 사건을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하였으며 안보리는 2010년 7월 9일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비추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22]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반응과는 달리 중국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온 후에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냉정과 절제', '분쟁과 갈등을 야기하는 행위 반대', '대화를 통한 외교적 타결' 등을 주장하며, 조사결과에 대하여

---

20) 천안함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은 해군 공식사이트 참조. http://www.navy.mil.kr/html/web1/ 001006001010001.html.

21) 합동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미국을 비롯한 22개 국가들은 이에 동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는 다음을 참조. 대한민국 국방부,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 http://www.mndcic.mil.kr/user/cic/mycodyimages/report_kor_1.pdf.

22)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은 다음을 참조. Security Council 6355th Meeting (AM), "Security Council Condemns Attack on Republic of Korea Naval Ship 'Cheonan,' Stresses Need to Prevent Further Attacks, Other Hostilities in Region," Security Council SC/9975 (July 9 2010). http://www.un.org/ News/Press/docs/2010/sc9975.doc.htm.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였다.[23] 중국이 이렇게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판명을 유보한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이유는 당시 북한의 내부 상황을 예사롭지 않게 보았기 때문이다. 점차 악화되고 있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화폐개혁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경제곤란, 그리고 김정일의 건강악화와 불안정한 권력세습 가능성, 게다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판명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국제사회로부터의 군사적 보복 및 맞대응과 그에 따른 한반도의 긴장상황 등 북한의 대내외적인 위기를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24]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책임에 대한 모호한 태도와는 달리 천안함 사건에 대한 방어적 차원으로 실시한 한·미 연합훈련('불굴의 의지' 및 '을지 프리덤 가이던스 군사연습)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발하였다. 중국은 특히 원래 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미국 '조지 워싱턴 호' 항공모함의 서해진입에 대해서는 반발의 강도를 최고조로 올렸다.[25] 물론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합동군사훈련의 목적이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명백히 밝히면서 중국을 설득하였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작전 반경이 600~700㎞인 조지 워싱턴호 등의 항모 전투단에 베이징(北京)은 물론 동북 3성의 군사정보가 모조리 노출될 것을 우려하여 심각하게 반발하였으며, 결국 한·미 연합군은 조지 워싱턴 호가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동해에서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26]

---

23) 중국외교부 대변인 친강(秦剛)의 2010年 6月 22日 기자회견 발언 참조. http://big5.fmprc.gov.cn/gate/big5/www.fmprc.gov.cn/mfa_chn/fyrbt_602243/jzhsl_602247/t710763.shtml.

24)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은 외부의 압력이 지나치게 커지면 북한의 체제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이 처한 딜레마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천안함 사태 이후 중국의 딜레마와 한·중관계의 미래," 『EAI 논평』, 제9호 (2010년 6월 25일. http://www.eai.or.kr/data/bbs/ kor_report/2010101912351814.pdf; 이동률, "천안함 사건 이후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 중국 외교 전략의 변화를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 No. 2010-28 (2010년 10월). http://www.jpi.or.kr/ contents/?mid=KR1710; 전병곤, "천안함 사건과 중국의 딜레마," 『프레시안』, 2010년 5월 28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60724.

25) 중국외교부 대변인 친강(秦剛)의 2010年 7月 8日 기자회견 발언을 참조. http://big5.fmprc.gov.cn/gate/big5/www.fmprc.gov.cn/mfa_chn/fyrbt_602243/jzhsl_602247/t714888.shtml. 중국 군사과학학회 부비서장인 뤄위안(罗援) 소장은 중국의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미국의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에서 훈련한다면 '중국 인민해방군의 훈련용 과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罗援, "解放军少将称美国已对中国形成'满月形'包围," 『广州日报』, 2010年 7月 18日. http://military.people.com.cn/GB/ 12174174.html; 杨毅, "我少将激辩美高官团 直言美是中国最大威胁," 东方网, 2010年 4月 24日. http://mil.chinaiiss.com/html/20104/24/a25330.html

26)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조지 워싱턴 호는 동해훈련에 참여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러한 결정이 중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중국의 반발에 직면하여 훈련시기를 미루는 등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美, 조지워싱턴호 동해훈련 참가 확정," 연합뉴스, 2010년 7월 15일. http://www.yonhapnews.co.kr/issues/2010/07/15/

천안함 사건 이후에 보여준 중국의 태도를 평가해 보았을 때, 중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은 중국의 공세적 태도의 한 사례라고 평가된다. 우선 중국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도발이라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책임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정권을 보호하고 북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의 도발이 지역안보에 핵심적인 위협이라는 우리의 입장과는 달리,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지역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서해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하였다. 특히 조지 워싱턴 호의 서해 진입 차단에 성공함으로써 서해에 대한 한·미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이 지역을 중국의 '내해화'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태도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인식되었으며,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의 한 사례로 간주되었다.[27]

2. 이어도 문제

이어도는 지리적으로 마라도로부터 약 149km(80해리), 중국의 퉁다오(童島)로부터 약 247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수중암초이다.[28] 수중암초란 섬이나 암석에도 해당하지 않고, 암초도 아니며, 썰물 때는 노출되나 밀물 때는 물에 잠기는 간조노출지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법적 효과도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어도 자체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과 중국의 바다 폭이 400해리를 넘지 않기 때문에

1202380000AKR20100715010600071.HTML.

27)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한국 미디어의 보도는 다음을 참조. "중 '이러면 한국 안 좋아' 한 '우리가 판단할 문제'," 『중앙Sunday』, 2010년 7월 18일자. http://sunday.joins.com/article/ view.asp?aid=18082.

28) 국제적으로 이어도(離於島)는 1900년 이어도에 충돌한 영국 상선의 이름을 따라 소코트라암(Socotra Rock)으로 불리며, 중국에서는 쑤옌자오(苏岩礁)라고 불린다. 이어도 해역은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태풍의 길목이어서 해양기상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며, 연간 수십만 척의 선박이 통항하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다. 이어도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구민교, "지속가능한 동북아시아 해양질서의 모색: 우리나라의 해양정책과 그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제20권 2호 (2011 여름), pp. 1-36; 김영구,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이어도가 한국과 중국의 영토로부터 모두 200해리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모든 국가는 배타적경제수역과 관련하여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권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법은 이렇게 권원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타국의 권원과 중첩하는 경우 그 최종적인 해결방안으로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어도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한·중 간의 관련수역에 대한 최종적 해양경제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29]

그러나 이어도 분쟁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의 군사 전략적 가치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동중국해의 수심이 얕기 때문에 칭다오의 북해함대나 상하이 근처의 동해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어도 해역을 꼭 거쳐야하기 때문이다.[30] 특히 최근 미·중간에 해양 패권경쟁이 심화됨고 있고 중국은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해역에 대한 중국의 해군력 증강 및 방어선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31] 또한 중국군은 역내에서 미군의 군사적 개입이나 영향력 확대를 억지하고자 소위 '반접근(anti-access) 및 지역거부(area denial)'를 위한 전력대비에 집중하고 있다.[32] 이어도는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국 태평양함대의 서해 및 동중국해 진출의 교두보이기도 하고, 중국의 제1도련선(First Island Chain)에 포함된 '접근거부'의 전진방어선 수역이기 때문에 중국이 군사전략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최근 이어도 논란의 발단은 2012년 3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중국 국가해양국장 류츠구이(刘赐贵)와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면서 시작되었다. 류국장은 인터뷰에서 "국가해양국은 중국 관할 해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권익 보호 차원의 순찰과 법 집행을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현재 국가해양국 소속

---

29) 이어도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신창훈, "이어도 문제의 본질과 우리의 대응,"『이슈브리프』, No. 21 (2012년 3월 15일). http://asaninst.org/%ec%9d%b4%ec%96%b4%eb%8f%84-%eb%ac%b8%ec%a0%9c%ec%9d%98-%eb%b3%b8%ec%a7%88%ea%b3%bc-%ec%9a%b0%eb%a6%ac%ec%9d%98-%eb%8c%80%ec%9d%91/; 고성윤·김수지, "이어도 문제의 핵심 쟁점 분석 및 대응 정책방향에 대한 소고,"『週間國防論壇』, 제1492호 (2013년 12월 9일). http://www. kida.re.kr/?sidx=861&stype=1&idx=776&pageNo=2&skey=&sword=.

30) 김영구,『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31) 조현태, "미·중 해양전략과 동북아 파장," 제2차 세종 국가전략 포럼 발표문, "急變하는 東北亞 안보환경과 韓國의 대응방향," 르네상스 서울호텔 다이아몬드볼룸III(3층), 2010년 10월 28일, pp. 49-59.

32) 중국의 A2/AD전략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태호, "중국의 '반접근 전략'과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Strategy 21』, 통권 29호 (2012년 여름), pp. 125-55.

순시선과 항공기의 순찰 범위에 이어도가 포함된다"고 밝혔다.[33] 이어도 논란의 시작은 우리의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대한 중국의 항의에서 비롯되고 있으며,[34] 2006년 12월 한·중 해양경계 획정 회담에서 "이어도는 수중암초이므로 양국 간 영토분쟁은 없다"는데 동의했던 중국이 다시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이어도 문제를 쟁점화한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연결지어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게다가 최근 5년 동안 중국 관공선이 이어도 해역에 나타난 횟수는 38회에 달하며, 항공기 및 군함, 그리고 어선까지 보내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35]

문제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이어도 문제와 관련하여 한·중 양국은 "배타적경계수역(EEZ) 경계획정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방침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나, 경계획정의 방법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측이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을 양국 기점의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삼는 국제 해양법 재판소의 '중간선' 원칙에 따라 이어도가 우리의 EEZ 내에 속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측은 이어도가 자국의 육지영토로부터 자연적으로 연장된 대륙붕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비하여 해안선이 더 길고 인구가 훨씬 많으므로, 중간선을 기준으로 영역을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36] 향후에도 한·중간에 EEZ 경계획정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겠지만, 중국은 경계획정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증강된 해군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국의 도련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어도 분쟁에 접근하고 있다.[37] 현재는 이어도 분쟁 이슈가 수면 아래에 잠재하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적·외교적 전략을 고려해 볼 때, 이 문제는 언제라도 표면화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슈이다.

---

33) 刘赐贵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을 참조. "国家海洋局局长刘赐贵: 坚定不移维护海洋权益," 新华网, 2012年 3月 3日.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2lh/2012-03/03/c_111599340.htm.

34) 중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건설이 논의되던 1995년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우리가 건설을 위한 공사를 시작한 2000년과 2002년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 건설과 중국의 반대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진행남, "이어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JPI 정책포럼』, No. 2012-04. http://www.jpi.or.kr/contents/ ?mid=KR1710.

35) "계획된 中 '이어도 도발' 힘받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新東亞』, 2012년 5월호, pp. 158-66.

36) 진행남, "이어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 『JPI 정책포럼』, No. 2012-04.

37) 고성윤·김수지, "이어도 문제의 핵심 쟁점 분석 및 대응 정책방향에 대한 소고," 『週間國防論壇』, 제1492호 (2013년 12월 9일).

3.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중국은 2013년 11월 23일 동중국해에 대한 방공식별구역(CADIZ: Chines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으며, 이 구역을 비행하려는 모든 항공기는 사전에 비행계획을 중국 정부에 알려야 하고 식별을 위한 송수신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주권국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이며, 국제법 및 국제관례에 부합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하였으나,[38] 미국을 비롯한 중국 주변에 위치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아시아 역내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 및 긴장을 고조시키는 움직임이라고 인식하였으며,[39] 이에 따라 한·미·일은 모두 공식적으로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불인정 전략을 펼쳤다. 일본은 선포직후부터 중국측에 통보없이 군용기를 출격시켰으며, 미국도 같은 전략을 구사하였다. 특히 미국은 B-52 폭격기 2대를 중국측에 통보없이 출격시켜 무력시위를 통한 불인정 전략을 수행했으며, 한국도 P-3C 해상초계기를 중국에 사전통보 없이 이 지역에 진입시켰다.[40] 한편 한·미 양국은 중국의 항공식별구역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는 않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민항기의 비행계획을 중국 측에 사전 통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중국에 대응수위를 조절하면서 지역갈등의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41]

이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중국의 공세성은 지역안보적 측면과 한·중관계적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우선 지역안보적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이

---

38) "外交部: 美方无权对中方划设防空识别区说三道四," 鳳凰網, 2014년 2월 8일. http://news.ifeng. com/mil/2/detail_2014_02/08/33619689_0.shtml.

39) "Concern Mounts in China's Air-Defense Zone," *The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25, 2013.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02304017204579226031095207724?mod=WSJAsia_ hpp_LEFTTopStories.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미국의 불만은 최근 일본을 방문한 척 헤이글(Chuck Hagel)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도 나타나있다. 그는 "중국이 영유권 갈등에 있는 섬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Hagel, Chinese Defense Chief Lock Horns over Territorial Disputes," Time, April 8, 2014. http://time.com/53340/hagel- china-territorial-disputes/.

40) 美 B-52 전폭기, 中 선포 방공식별구역서 무력시위, "『조선일보』, 2013년 11월 28일. http:// 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1/28/2013112800630.html.

41) "U.S. Airlines Advised to Comply With China Defense Zone," *Wall Street Journal*, November 30, 2013.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02303562904579229060081679796.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주요 의도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중·일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은 현격히 높아졌고, 동아시아의 안보 또한 위기수준으로 불안정해졌다.[42] 또한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미국 정찰기의 활동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은 정보수집 활동의 일환으로 중국 주변에 정찰기를 보내왔으며, 중국은 그동안 이러한 미국의 정찰활동을 민감한 사안이 아니면 방치해 왔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 방공식별구역의 선포를 통하여 미국 군용기의 활동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적당한 시기에 방공식별구역을 다른 지역에도 설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 범위에는 서해(황해), 남중국해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지역국가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높다.[43]

둘째, 한·중관계 측면에서 이번 사건을 본다면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는 주요 목표가 일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는 부분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3년 11월 28일 열린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백승주 국방부 차관을 통하여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에게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그 범위를 재조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1)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사전협의 없이 진행됐고 우리와 겹치는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주변국 방공식별구역에도 이어도가 포함돼 있지만 우리 군은 주변지역의 관할권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등이 중첩되는 부분을 시정해 달라. 우리

---

42) 중국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자국 저장(浙江)성 130㎞ 앞까지 접근해 있는 등 중국 공역을 자의적으로 일본 방공식별구역 안에 넣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센카쿠열도는 물론 오키나와 서쪽 지역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함으로써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ill Gertz, "China Threatens Japan Ahead of Biden Trip," *The Washington Free Beacon,* December 3, 2013. http://freebeacon.com/national-security/china-threatens-japan-ahead-of-biden-trip/.

43) Kimberly Hsu,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Intended to Provide China Greater Flexibility to Enforce East China Sea Claims," *U.S.-China Econ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f Report,* January 14, 2014. http://origin.www.uscc.gov/sites/default/files/Research/China%20ADIZ%20Staff%20Report.pdf; Alex Calvo, "China's Air Defnese Identification Zone: Concept, Issues at Stake and Regional Impact, "*Working Paper* 1 (December 23, 2013). http://www.usnwc.edu/ Publications/Working-Papers/Documents/WP1-Calvo.aspx.

정부도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4) 이번 조치로 동중국해 영내 국가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우려된다. 긴장 완화를 위해 영내 국가 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44]

그러나 왕관중 중국 부총참모장은 주권 차원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만큼 CADIZ를 조정할 의향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45]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는 이어도를 비롯한 마라도, 홍도 등이 포함된 새로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방공식별구역 관련 법령을 근거로 군 항공작전의 특수성, 항공법에 따른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의 범위 및 국제관계 등을 고려해 KADIZ 범위를 조정・발표하였다.[46] 이로써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시작되었던 일련의 과정은 일단락되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주변국들의 저항없이 KADIZ의 범위를 확장하는 외교적 실리도 얻게 되었지만,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우선 2013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취임 이후 한・중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양국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이 KADIZ와 중첩되는 구역을 포함한 CADIZ를 선포하면서 한국과 전혀 상의가 없었다는 것은 한・중간의 신뢰관계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중국은 2013년 10월 "주변국외교공작좌담회(周邊外交工作座談會)"를 개최하여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설정을 선언해놓고 그 뒤에 나타난 첫 행동이 방공식별구역 선포였다.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이 전원 참석한 주변국외교공작좌담회는 향후 5-10년간 중국 주변국 외교의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회

---

44) 국방부가 발표한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 결과 보도자료에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문제를 의제로 다루고, 백차관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였다"라고만 명시되어있다.
http://www.mnd.go.kr/user/newsInUserRecord.action?id=mnd_020400000000&siteId=mnd&page=15&newsId=I_669&newsSeq=I_3168&command=view&parent=&findStartDate=&findEndDate=&findType=title&findWord=&findWriterName=&findOrganSeq=.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뉴시스, 2013년 11월 28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28_0012550846&cID=10201&pID=10200.

45) "정부, 방공식별구역 조정 요구 -- 中, 수용 거부," 연합뉴스, 2013년 11월 28일.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11/28/0503000000AKR20131128146451043.HTML.

46) 『동아일보』, 2013년 12월 9일. http://news.donga.com/BestClick/3/all/20131209/59418731/1.

의였으며, 중국이 직면한 주변국 외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도출하는 자리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좌담회에서는 중국 주변국 외교의 키워드로 '친(親)・성(誠)・혜(惠)・용(容)'의 4글자를 제시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그 의미는 親(주변국과 더욱 친하게); 誠(성의를 다해 대하고); 惠(중국 발전의 혜택 나누며); 容(주변국을 더욱 포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47] 사실 방공식별구역이 실질적인 영토확장도 아니고 국제규범 차원에서 문제있는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너무 급작스러웠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일본 및 한국의 구역과 중첩된다는 점에서 주변국들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Ⅳ. 향후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에 대한 평가: 변수와 전망

이 같은 배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는 결국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인가? 지속된다면 더 강화될 것인가? 아니면 점차 수그러들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을 이끌고 있는 시진핑 정부는 신형대국관계와 주변국 외교를 통하여 미국 및 주변국가들과의 협력 및 관계강화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 정부는 핵심이익과 연관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세적 대외행태를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親・誠・惠・容"의 원칙하에 주변국과의 협력을 도모하고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핵심이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중국의 이러한 선언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중국은 신형대국관계와 주변국 외교에서도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예외를 두었으며, 이로써 중국은 향후 미・중관계 및 대(對) 동아시아 관계에서 핵심이익

47) "习近平在周边外交工作座谈会上发表重要讲话," 人民网, 2013年 10月 25日. http://politics. people.com.cn/n/2013/1025/c 1024-23332318.html. 중국의 주변국 외교 좌담회의 주요내용이었던 亲・诚・惠・容에 대한 중국의 설명은 다음을 참조. "中国特色周边外交的四字箴言：亲・诚・惠・容," 新华国际, 2013年 11月 8日. http://news.xinhuanet.com/world/2013 -11/08/c_118063342.htm.

과 관련된 이슈를 빌미로 공세적 대외행태를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48)]

따라서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는 2010년과 같이 강력하게 추진되지는 않을지라도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슈와 상황에 따라 그 강도에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 요소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중국 정부가 규정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최근 영토분쟁지역과 같은 민감한 지역 및 이슈를 핵심이익으로 분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핵심이익 관련 주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핵심이익을 중심으로 공세적 대외행태를 추진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으며, 중국이 핵심이익의 범위에 들어가는 이슈들을 늘여나가는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가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49)]

향후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관련된 두 번째 변수는 미국에 대한 정책적 견제이다.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는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주변국과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미국에 대한 견제 의지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국력격차가 점차 좁혀짐에 따라 그 강도가 세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센카쿠/댜오위다오는 현재 일본이 관할하고 있는데다 이 지역은 미·일동맹에 포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군사적 갈등을 겪을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의 개입을 유인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센카쿠/댜오위다오 문

---

48) 신형대국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韩磊, "中美新型大国关系意味着什么,"『风凰周刊』, 2014年 1月 15日. http://carnegietsinghua.org/2014/01/15/%E4%B8%AD%E7%BE%8E%E6%96%B0%E5%9E%8B%E5%A4%A7%E5%9B%BD%E5%85%B3%E7%B3%BB%E6%84%8F%E5%91%B3%E7%9D%80%E4%BB%80%E4%B9%88/gyh3; "如何构建中美新型大国关系-王毅外长在布鲁金斯学会的演讲," 2013年 9月 20日. 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078765.shtml; Caitlin Campbell and Craig Murrary, "China Seeks a 'New Type of Major-Countr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 Research Backgrounder,* June 25, 2013. http://origin.www.uscc.gov/sites/default/files/Research/China%20Seeks%20New%20Type%20of%20Major-Country%20Relationship%20with%20United%20States_Staff%20Research%20Backgrounder.pdf; 张沱生, "如何构建中美新型大国关系,"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36224/Zhang_Tuosheng_Chinese_Final.pdf.

49) 중국의 핵심이슈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潘蔚娟, "中美核心国家利益之比较,"『国际资料信息』, 2006年 第9期. http://ias.cass.cn/PDF_FILE/2008381123.pdf, Michael D. Swaine, "China's Assertive Behavior-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4 (Winter 2011). http://media. hoover.org/sites/default/files/documents/CLM34MS.pdf

제에 접근함에 있어서 항상 미국의 반응 내지는 대응을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형대국관계에서 지적하듯이 향후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협력과 대립이 공존하는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슈에 따라 미·중간의 대립이 이어지는 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50]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와 관련된 세 번째 변수는 주변외교공작좌담회에서 제시했던 "운명공동체(命運共同體)"라는 개념이다. 운명공동체란 개념은 중국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잘 전파하고 이웃나라 국민과 함께 잘 지내길 바라는 중국의 의지를 이 지역의 발전과 연계시켜 다뤄야할 필요성에 의하여 제기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며, 그 목표는 주변국가들 사이에서 중국과 이들 국가들이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을 뿌리내리도록 하고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한다.[51] 물론 중국지도부는 운명공동체의 개념 및 그 목표가 주변국과의 우호적인 관계설정에 있다고 강조하지만,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한 중국 주변국 전략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2014년 『아태남서(亞太藍皮書)』(2013년 12월에 발간)를 보면 향후 중국이 주변국 관계에서 공세적 외교를 전개할 가능성을 예시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52]

우선 『아태남서』는 향후 5-10년 내에 직면할 수 있는 아태지역의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그 중 주목할 만한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외부환경 질서를 받아들이고 이에 수동적으로 적응해왔던 "적응자(適應者)"에서 이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구도와 질서를 수립하는 "구도건설자(構建者)"로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력 및 국가능력이 아태지역의 질서를 바꾸거나 환경을 재구성할 정도로 강

---

50) Zhu Feng, "U.S. Rebalancing in the Asia-Pacific: China's Response and the Future Regional Order," Discussion Paper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New Zealand), No. 12 (2012). http://www.isn.ethz.ch/Digital-Library/Publications/Detail/?lng=en&id=165042; Ely Ratner, "Rebalancing to Asia with an Insecure China, "*Washington Quarterly,* Vol. 36, No. 2 (Spring 2013), pp. 21-38; Robert G. Sutter, Michael E. Brown, and Timothy J. A. Adamson, with Mike M. Mochizuki and Deepa Ollapally, "Balancing Acts: The U.S. Rebalance and Asia-Pacific Stability,"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August 2013). http://www2.gwu.edu/~sigur/assets/docs/BalancingActs_Compiled1.pdf.

51) 중국과 주변국관계를 운명공동체의 개념으로 설명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 张蕴岭, "中国与周边关系命运共同体的逻辑," 人民网, 2014年 2月 18日. http://theory.people.com.cn/n/2014/0218/c367550-24393940.html; 阮宗泽, "中国需要构建怎样的周边," 『国际问题研究』, 2014年 2期. http://www.ciis.org.cn/gyzz/2014-03/26/content_6772740.htm.

52) 李向阳 主编, 『亚太地区发展报告中国的周边环境』(北京: 社会科学文选出版社, 2014).

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이제는 외부환경에 무조건적·피동적으로 적응해 가는 단계는 초월했으며, 국제사회의 제반 이슈들에 적극 참여하고 조정하는 "조정자(調整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부각시키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자국의 역할을 적응자에서 조정자로, 또 다시 구도건설자로 전환하면서 아태지역에 대한 자국의 역할 강화 및 영향력 확대를 시도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53]

둘째, 중국은 향후 5-10년 사이에 대다수의 주변국들이 중국에 대하여 가깝지만 친하지 않은(近而不親)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아태남서』는 미국의 퓨 리서치 연구소(Pew Research Center)와 영국 BBC 방송의 공동조사를 기초로 중국 주변국들의 대중국 호감도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파키스탄을 제외한 대다수의 주변국들이 중국에 대하여 적극적인 호감도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점과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好不好가 반반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사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은 주변국과와의 관계개선에 노력해 왔으나, 그 관계는 아직까지 경제부문에서의 협력 및 관계강화에 제한되어 있고 그 외의 다양한 분야로까지 확대하여 교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54]

셋째, 『아태남서』에서는 중국 주변국들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분포가 2020년까지 계속 고조되다가 2021년부터 하락하는 "거꾸로된 U자형"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즉 중국은 향후 몇 년 동안 자국의 발전과정에서 중국과 주변국간의 분쟁 및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과 주변국의 경제발전이 경쟁관계에 놓이게 되고 중국의 군사현대화가 꼭 필수적인 사업임에도 군사적 신뢰관계가 부족하여 육지 및 해상 영토분쟁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자국의 해외이민의 증가 및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증가, 그리고 중국과 주변국간의 인적교류 증가로 주변국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5-10년 사이에 중

53) "中国与周边的关系正从'适应者'转向'构建者'," 中国新闻网, 2013年 12月 26日. http://www.chinanews.com/gn/2013/12-26/5668506.shtml; 李向阳 主编, 『亚太地区发展报告中国的周边环境』, pp. 72-74.

54) 宋荣华, "中国周边为何'近而不亲'," 『广州日报』, 2013年 1月 24日. http://big5.xinhuanet.com/gate/big5/news.xinhuanet.com/world/2013-01/17/c_124241508.htm; "亚太蓝皮书: 绝大部分周边国家对中国近而不亲," 中国网, 2013年 12月 26日. http://big5.china.com.cn/gate/big5/news.china.com.cn/txt/2013-12/26/content_31012599.htm; 李向阳 主编, 『亚太地区发展报告中国的周边环境』, pp. 78-80.

국 주변국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거꾸로된 U자형" 발전형태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55)]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아태남서』에서는 주변국가와의 운명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경제협력을 위주로 주변국에 접근해 왔으나, 그 결과 안보문제가 경제협력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대두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역외 강대국의 역내 안보문제에 간섭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다. 둘째, 중국의 평화주의 원칙을 주변국들이 무력포기로 인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주변국들에게 중국의 국가이익 및 정책노선에 대하여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주변국들이 중국의 핵심이익 등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소프트파워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하드협력과 함께 소프트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외교와 더불어 공공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소프트협력과 공공외교의 핵심은 문화교류 및 신뢰증진 등을 통한 이미지 제고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변국들과의 친근한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56)]

『아태남서』는 이제 막 시작된 중국의 주변국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주변국가 외교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는 주변국과와의 관계를 꼭 협력적·우호적 관계정립 및 정책추진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주변국들과의 관계정립을 위한 논의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히려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를 정당화시켜주는 내용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주변국관계는 우호적인 관계와 갈등적 관계가 공존하는 형태의 외교적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55) 李向阳 主编,『亚太地区发展报告中国的周边环境』, pp. 85-87.
56) 李向阳 主编,『亚太地区发展报告中国的周边环境』, pp. 11-12.

Ⅴ. 결론: 동아시아/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및 우리의 대응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나타나고 있는 국제질서의 변화를 반영한 중국의 외교적 태도의 한 단면이며, 이것이 단순한 국가간의 역학관계 변화에 따라 나타난 단기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국제질서 구조의 변화에서 오는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가 현존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세력균형적 태도를 변화시키고 미국의 리더쉽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국력면에서 중국과 상당한 격차를 갖고 있고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중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주변국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 특히 한반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가 가져올 다양한 위협요인들을 사전에 인지·차단하고 가능하다면 이들 위협을 긍정적 요인들로 전환하면서 한·중 협력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미·중관계에 대한 전망을 비롯한 주요 이슈들을 놓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 논의했듯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의 기저에는 미·중 경쟁 및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미·중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평가가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우리의 대중외교가 나올 수 있으며, 그런 바탕 위에서 중국 공세적 외교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향후 미·중관계를 전망해 본다면, 앞으로 50년 내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구도 속에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우리의 기본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튼튼한 한·미동맹의 기틀 속에서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한·중관계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무난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드는 몇 가지 의문은 우선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용하여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확보하고 있나? 즉 우호적인 분위기하에 있었던 2013년 11월 당시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우리와의 협의없이 선포했다.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용하여 중국의 공세적 대외행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우리의 지렛

대(leverage)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그런 이슈들을 협의할 수 있는 좀 더 구속력있는 대화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이러한 질문들은 향후 우리의 대중외교의 방향을 논의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할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장기전략 부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 외교의 구조적 틀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어느 정부도 장기적인 외교전략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향후 한국외교의 가장 시급한 점은 장기전략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균형있는 외교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미래 한국외교를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장기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문제 처리에 대한 중국과의 협의 가능성 문제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한·중협력의 틀을 만들어 북한에 대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대북정책에 일부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실질적·근본적으로는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외교적 지렛대를 개발하고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도모하는 나름대로의 외교적 행동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은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도 공세적 대외행태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중관계의 친밀성과는 상관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중국 정부가 우호적인 한·중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은 하겠지만, 자국의 국가이익을 손해보면서까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할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중국은 한국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외교적 수단으로 삼게 된다면 전략적으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도 확실히 알고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훨씬 우위에 있으며 이런 전략적 우위를 십분 활용하여 대(對)한정책에 임할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무엇인가? 현재의 우호적인 관계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 우호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지렛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고성윤・김수지. 2013. “이어도 문제의 핵심 쟁점 분석 및 대응 정책방향에 대한 소고.”『週間國防論壇』. 제1492호 (12월 9일).

구민교. 2011. “지속가능한 동북아시아 해양질서의 모색: 우리나라의 해양정책과 그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국제・지역연구』. 제20권 2호 (여름), pp. 1-36.

김영구. 2008.『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김태호. 2012. “중국의 반접근 전략과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Strategy 21』. 통권 29호.

문순보. 2011. “남중해 영토분쟁: 중국의 지역패권주의와 관련국 대응.”『정세와 정책』. 7월호.

신창훈. 2012. “이어도 문제의 본질과 우리의 대응.”『이슈브리프』. No. 21 (3월 15일).

이동률. 2010. “천안함 사건 이후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 중국 외교 전략의 변화를 중심으로.”『JPI 정책포럼』. No. 2010-28 (10월).

이원형・이선진・신정승・임홍재・양봉렬・이건태・조병제. 2011. 『중국의 부상과 동남아의 대응』.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진행남. 2012. “이어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모색.”『JPI 정책포럼』. No. 2012-04.

Blumenthal, Daniel. 2010. “What Happened to China's Peaceful Rise?” Foreign Policy (October 21).

Calvo, Alex. 2013. “China’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Concept, Issues at Stake and Regional Impact.“ Working Paper 1 (December 23).

Campbell, Caitlin and Craig Murrary. 2013. “China Seeks a ’New Type of Major-Countr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 Research Backgrounder, June 25.

Chen, Dingding and Xiaoyu Pu. 2013/14. “Correspondence: Debating China’s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8, No. 3 (Winter), p. 177.

Chen, Dingding and Jianwei Wang,. 2011. “Lying Low No More?: China’s New Thinking on the Tao Guang Yang Hui Strategy.”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9, No. 2 (September), pp. 195-216.

Chih Chen, Hsin. 2011. “Soft Way to Consolidate Hard Power: China’s New ‘Low Profile’ Strategy Orientation.” Journal of Defense Studies. Vol. 5, No. 3 (July), pp. 151-161.

Christensen, Thomas F. 2011. “The Advantage of an Assertive China: Responding

to Beijing's Abrasive Diplomacy." Foreign Affairs. No. 90, No. 2 (March/April), pp. 54-67;

Glaser, Bonnie S. 2012. "China's Coercive Economic Diplomacy." The Diplomat. July 25.

Gong, Gloria Jean. 2011. "What China Wants: China's Climate Change Priorities in a Post-Copenhagen World." Global Change, Peace & Security. Vol. 23, No. 2 (June), pp. 159-175.

Han, Sukhee. 2008. "From Engagement to Hedging: South Korea's New China Policy."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0, No. 4 (December), pp. 335-51.

Ikenberry, John. 2008. "The Rise of China and the Future of the West: Can the Liberal System Survive?" Foreign Affairs. Vol. 87, No. 1 (January/February), pp. 23-37.

Jakobson, Linda and Dean Knox. 2010. "New Foreign Policy Actors in China." SIPRI Policy Paper. 26 (September).

Johnston, Alastair Iain. 2013. "How New and Assertive Is China's New Assertivenes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7, No. 4 (Spring), pp. 7-48

Lam, Willy. 2010. "Beijing Seeks Paradigm Shift in Geopolitics." China Brief. Vol. X, Issue 5 (March 5).

Levy, Jack S. 2008. "Power Transition Theory and the Rise of China." In Zhu Feng and Robert S. Ross, eds. China's Ascent: Power, Security, and the Fu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pp. 11-33;

Ratner, Ely. 2013. "Rebalancing to Asia with an Insecure China. "Washington Quarterly. Vol. 36, No. 2 (Spring), pp. 21-38;

Shekhar, Vibhanshu. 2012. "ASEAN's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 Deploying a Hedging Strategy." China Report. No. 48 (August), pp. 253-68;

Sutter, Robert G., Michael E. Brown, and Timothy J. A. Adamson, with Mike M. Mochizuki and Deepa Ollapally. 2013. "Balancing Acts: The U.S. Rebalance and Asia-Pacific Stability." Sigur Center for Asian Studies (August).

Swaine, Michael D. 2011 "China's Assertive Behavior-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4 (Winter).

_____. 2011. "China's Assertive Behavior-Part Two: The Maritime Periphery." China Leadership Monotor. No. 35 (Summer).

_____. 2012. China's Assertive Behavior-Part Three: The Role of the Military in Foreign Policy."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6 (Winter).

_____. 2012. "China's Assertive Behavior-Part Four: The Role of Military in Foreign Crise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7 (Spring).

Thayer, Carlyle A. Thayer. 2014. "Can ASEAN Respond to the Chinese Challenge?" YaleGlobal Online, March 18.

Wang Jisi. 2011. "China's Search for a Grand Strategy: A Rising Great Power Finds Its Way." Foreign Affairs. Vol. 90, No. 2 (March/April), pp. 68-79.

Hsu, Kimberly. 2014.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Intended to Provide China Greater Flexibility to Enforce East China Sea Claims."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f Report. January 14.

Zhao, Suisheng. 2011. "China's New Foreign Policy 'Assertiveness': Motivations and Implication." ISPI Analysis. No. 54 (May).

Zhu, Feng. 2012. "U.S. Rebalancing in the Asia-Pacific: China's Response and the Future Regional Order." Discussion Paper (Centre for Strategic Studies, New Zealand), No. 12.

陈先奎. 2011. "探索中国特色的海外驻军."『环球时报』. 12月 21日.

高祖贵. 2011. "坦然应对'中国强硬论'."『理论导报』. 1期.

李向阳 主编. 2013.『亚太地区发展报告中国的周边环境』. 北京: 社会科学文选出版社.

潘蔚娟. 2006. "中美核心国家利益之比较."『国际资料信息』. 第9期.

阮宗泽. 2014. "中国需要构建怎样的周边."『国际问题研究』. 2期.

韦民. 2011. "对中国外交'强硬'的冷思考."『学习月刊』. 3期

王帆. 2011. "凌胜利: 中国的外交政策变强硬了吗？如何理解中国新外交."『当代世界』. 3期.

夏文辉・吴黎明, 2010. "中国'傲慢'了吗."『环球军事』. 7期.

张发岭・李兆谊. 2010. "中国强硬回击奥巴马对台新军售."『思想政治课教学』. 2期.

Abstract

China's Assertive Diplomacy and East Asian Security

Han Seok - Hee *

The year 2010 has been regarded as a year of China's assertive diplomacy. A series of China's behavior--including China's critical reaction to the U.S. for its sales of weapons to Taiwan, the Dalai Lama's visit to President Obama, China's arbitrary designation of 'core interests' over the South China Sea, China's inordinate reactions to the sinking of the Cheonan and Yeonpyeong bombardment, and China's activities in the Senkaku/Diaoyu island areas--has served as the witnesses to China's assertive diplomacy in 2010. The major causes of China's assertive diplomacy can be summed up by three factors: potential power transition from U.S. to China; emerging China's nationalism; and the recession of the Tao Guang Yang Hui as a diplomatic principle. But a majority of Western sinologists claim that China's assertive diplomacy is defensive in terms of its character.

China's neighboring states, however, perceive its assertive diplomacy as diplomatic threat. Due to these states' geographical proximity and capability gaps with China, these neighbors experience difficulties in coping with China's behavior. In particular, China's coercive economic diplomacy, in which China tends to manipulate the neighbors' economic dependency on China for its diplomatic leverage, is a case in point for China's assertive diplomacy. China's assertiveness seems to be continued even after the inauguration of Xi Jinping government. Although the Xi government's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diplomatic rhetorics in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and the "Convention for Neighboring States Policy" sound friendly and cooperative, its subsequent behavior, like unilateral announcement of Chinese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CADIZ), does not conform with its rhetoric.

Overall, China's assertiveness has been consolidated as a fashion of its diplomacy, and it is likely to continue in its relations with neighbors. As a neighboring state, the ROK should approach to it with more balanced attitude. In addition, it needs to find out a new diplomatic leverage to deal with China in accordance with its security environment, in which China plays a growing role.

Key words: China's foreign policy, China's diplomacy, China's economic diplomacy, China's assertive behaviors, power transition, power shift, East China S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East Asia's security, Korean Peninsula security, ROKS Cheonan Sinking, Ieodo issue